

희망세상 (2007년 2월호 / 53호)

- 발행인 : 함세웅
- 발행일 : 2007년 2월 1일
- 발 행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사업회 소식

사료관 사료 훈증 실시

사료관은 중요 사료들을 각종 곰팡이, 세균 등에 의한 훼손으로부터 방지하고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실시해왔던 훈증 소독작업을 지난해 12월 27일에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에는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친일관련 중요사료들도 포함시켜 타단체 소장 중요사료의 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를 계기로 중요사료를 보존하고 있으나 여건상 정기적인 소독작업이 어려운 관련 단체들의 소장 사료들을 함께 훈증하며 훈증방법을 다양화하고 횟수도 증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구술사료목록집』 증보판 발간

사료관은 지난해 12월, 『구술사료목록집』(이하 목록집) 증보판을 발간했다. 이는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구술수집 성과를 정리하여 2005년도에 발간한 목록집에 2005년도 수집분 13과제, 43명의 민주화운동 관련인사들의 자료를 추가한 것이다. 목록집은 2002년도부터 연도별로 정리하였고 내용은 과제명, 구술자, 면담자, 재생시간, 구술내용, 주제어 등 10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사료관 홍보물 『Archives』 발간

사료관은 사료관의 활동과 기능을 알리고 소장사료를 소개하는 홍보물 『Archives』를 발간했다. 총 60쪽으로 구성된 홍보물은 수집사료 50만 건, 전문적 관리기법을 적용한 사료정리, 사료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 자동화, 13만여 건의 DB구축 등의 성과와 열람안내, 활용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사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 중 각 시기별 중요사료 80여 건을 선별하여 사진과 함께 당시 상황설명을 담아 소개하였다.



6월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공청회

6월민주항쟁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정리와 국민화합이 이뤄질수있도록해야

지난달 11일(목) 오후 3시부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가 주관하고 6월민주항쟁20주년사업추진위원회가 주최한 '6월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에는 안병욱 교수(가톨릭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의 사회로 정해구 교수(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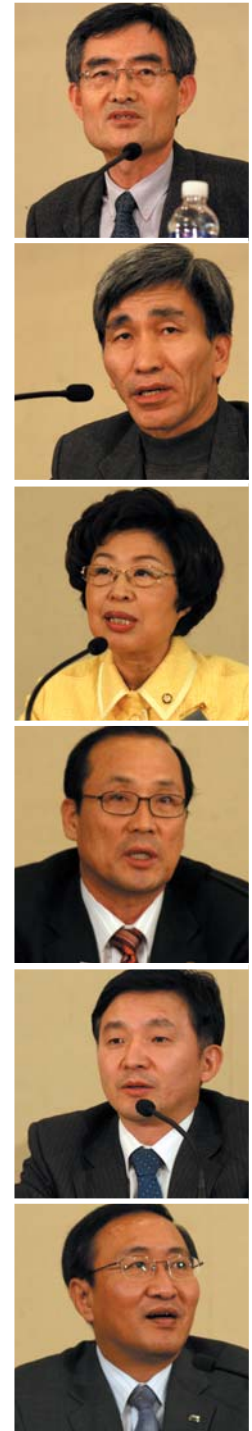
현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장영달(열린우리당), 원희룡(한나라당), 노회진(민주노동당), 손봉숙(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 토론자 중 박석은 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운동과 관련하여 수배중인 관계로 참석이 불가능해, 발제문을 대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동안 기념일 제정을 위해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대표 이사장 김상근)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2월에 기념일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하여 6월 대통령에게 건의하였고, 이어 '6·10국가기념일제정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6개 지역 설명회를 통해 청원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켰고, 11월에는 이인영 열린우리당 의원 주도로 국회 차원의 촉구결의안에 125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지난해 12월 8일(금)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되었다.

국가기념일은 1973년 3월에 시행된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6615호)에 따라 정부가 제정·주관하는 기념일인 바, 법령이 아닌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선언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위부터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손봉숙 민주당 의원, 장영달 열린우리당 의원,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헌법에 6월항쟁의 정신을 반영해야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정해구 교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는 헌법 전문을 소개하며, “이에 의한다면 대한민국이 계승하고 지향해야 할 정신은 4·19 민주이념과 민주개혁, 평화적 통일 등이나, 근대 민주국가로서의 대한민국 건립과 전개역사의 경험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민주주의 정신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어 “한국의 근대 민주국가의 등장과 발전에 있어, 특히 그 골격이 잡히고 틀이 세워졌던 초기 과정에서 4월혁명으로부터 6월항쟁에 이르는 민주화의 역사적 경험과 그 정신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과연 한국 민주주의의 헌법 정신을 제대로 논할 수 있는 것인가?”를 묻고 “프랑스대혁명의 정신이 인권선언을 통해, 미국 독립전쟁의 정신이 독립선언을 통해 즉각 반영된 것에 비해, 1987년 6월항쟁의 결과로서 등장한 1987년 개정헌법의 전문은 이 같은 민주화운동의 경험과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방 뒤 위로부터 주어진 한국의 민주주의가 4·19혁명으로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운동으로 전환됐고, 광주민중항쟁은 민주화운동을 더욱 심화시키고 발전시킨 사건이라면 마침내 권위주의 체제의 민주화를 이뤄낸 6월항쟁은 민주화 운동의 절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며,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 초기 내용의 주춧돌이 됐다는 점에서 6월항쟁의 경험과 정신은 헌법 정신에까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결론적으로 “6월민주항쟁이 민주화운동의 그 어느 사건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기념할 필요가 있으며, 그 기념은 최소한 두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6월항쟁 발생의 첫 날인 6월 10일을 일단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일과 둘째, 민주화운동과 그 정점으로서의 6월항쟁을 기념하기 위

해 전국적이며 통사적인 차원의 민주화운동 기념공간을 건립하는 일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특히 기념공간 건립과 관련하여 “일제 식민지배 하에서의 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독립기념관이 건립된 지(1987년) 오래고, 한국전쟁을 기념하기 위해 전쟁기념
관을 건립한 지(1994년) 상당한 기간이 흐른 만큼, 이들과 비교하여 6월항쟁을 포
함하여 한국 민주화운동 전체를 포괄하는 기념공간 건립이 덜 중요하게 간주될 이
유는 없다.”며 따라서 “민주화운동기념관 혹은 한국민주주의전당 건립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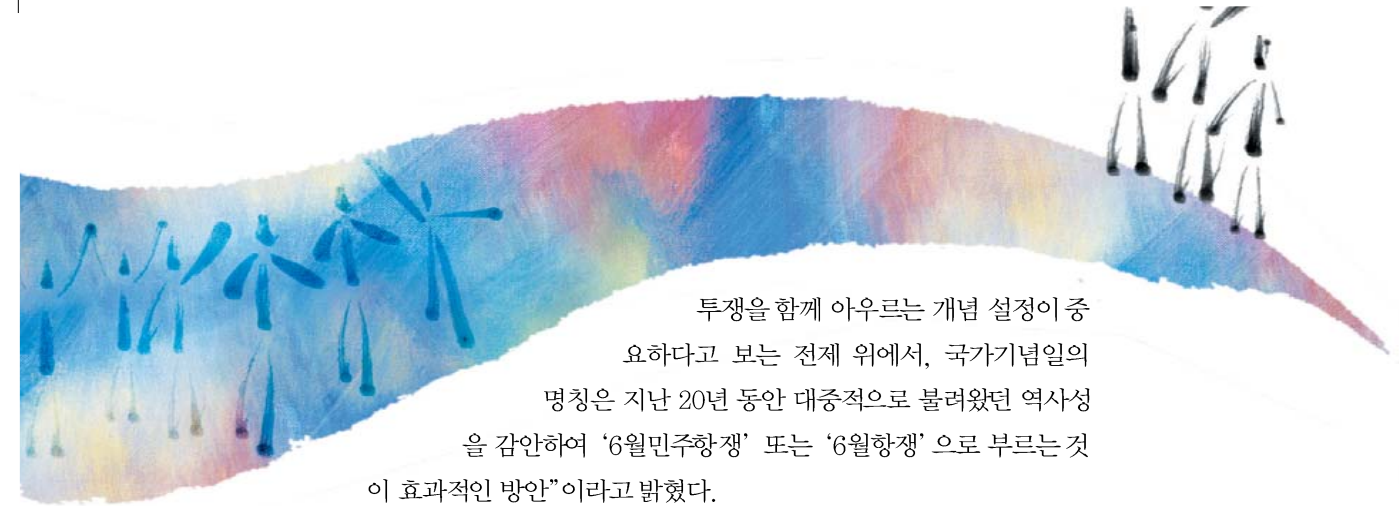
6월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의 통합적 파악과 계승

이러 박석은 집행위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6월민주항쟁이 한국사회 전체 민주화
운동 진영의 조직적 참여와 지도를 통해 이루어진 항쟁이라는 점, 5월항쟁 이후 끈
질기게 진행되어 온 민주화운동의 역량이 총결집된 결과, 군사독재정권에 반대하
는 범국민적 참여를 통해 진행된 항쟁이라는 점, 사실상 군사독재체제의 붕괴를 촉
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항쟁이라는 점, 6월민주항쟁의 결과 각종 부문의 실질적
민주화를 촉발시키고,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 민주화운동의 기념비적 항쟁”이라고 6월항쟁의 의
의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한 “5월항쟁의 맥을 이은 1987년의 6월민주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두 가지 흐름을 하나의 대항쟁으로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국민
항쟁으로 승화시키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1987년 이후 분화·발전되
어 온, 시민사회운동과 노동민중운동의 흐름이 하나로 포괄되는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따라서 “6월항쟁의 개념을 확장하여 7~9월 노동자대투쟁까지 포괄하여 파악한
다는 ‘6월항쟁의 확장된 개념’은 1980년대의 변혁운동 이래 분화·발전되어 온
두 운동이 서로의 접점을 확인하고 새로운 연대와 통합의 지점을 모색해 나가는 당
위성과 지향점을 제시하는 문제의식의 소산”이라며 “국가기념일 제정뿐만 아니라
6월항쟁 20년은 1987년 6월항쟁을 바르게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기억투쟁’ 의
주체를 보다 민중적으로 설정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현 단계에서 개념적으로는 6월민주항쟁과 7~9월 노동자대



투쟁을 함께 아우르는 개념 설정이 중
요하다고 보는 전제 위에서, 국가기념일의
명칭은 지난 20년 동안 대중적으로 불려왔던 역사성
을 감안하여 ‘6월민주항쟁’ 또는 ‘6월항쟁’으로 부르는 것
이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6월민주항쟁의 국가기념일 제정에 공감

발제에 이어 첫 번째 토론에 나선 손봉숙 민주당 의원은 “6월항쟁의 역사적 의미는 특
정 계층이나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화이트 칼라를 포함한 중산층까지 참여한 전 국민의
민주화 항쟁”인만큼 “6월항쟁 기념일을 시위에 참가한 이들만의 축제로 축소시키거나
‘민주세력’이라는 말로 포장해 특정세력이나 특정인의 기득권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
어야 하며, 기념일 지정 논의가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비춰져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 2기 민주정부를 지내고 있는 지금 참여정부 마지막에 와서 위기를 맞고 있
다.”고 말문을 연 장영달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5·16군사쿠데타가 혁명이라는 이야
기가 쿠데타정권 참여자가 아니라 젊은 네티즌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 심히 우려
된다.”며 “이 때문에 이 시점에서 6월항쟁을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
혔다.

장 의원에 이어 토론에 나선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6월항쟁으로 쟁취한 민주화의
가치를 되돌리려는 이념집단이나 정치세력이 있다면 결국은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며, “탈권위와 투명성의 추구라는 도덕적 정당성은 확보했지
만 국민들에게 약간의 여유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 즉 실적의
정당성이 있었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민주화세력은 국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하
고 겸허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1987년 6월항쟁이 이후 절반이라도 성공을
거둔 반면, 당시 7~9월 노동자대투쟁은 여전히 정치적 시민권을 얻지 못하면서 오히려
민주정부와 대립해온 측면도 있다.”며 그럼에도 “6월항쟁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계승할
생각이 없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므로 특히 대선주자로 보도되는
이들에게 ‘6월항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6월항쟁 정신을 계승할 것이냐’를 반드시
따져 물어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